

문자·활자문화진흥법 시책 구체화

2005년 문자진흥법 등 세밀화로 진화하는 일본 독서환경

글_ 백원근(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교사 5년간 1,000명 확충 계획

2005년 7월 22일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이하 '문자진흥법')이 일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래, '독서주간'이 시작된 지난 10월 27일에는 첫 번째 '문자·활자문화의 날'이 각종 행사와 이벤트 속에 시행되었다. 이후 기본법이자 이념법의 성격을 지닌 문자진흥법의 구체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은 문자진흥법에 따른 시책으로 여론 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을 문자·활자의 날에 개최했으며, 올해부터 지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도서관 중심의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21세기 비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직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다면적인 사서 교육·연수 강화, 청소년 단체의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금 교부, 교사 대상의 '전국 독해력 향상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문부성이 초, 중, 고교에서의 독서활동 지도를 담당할 전담 사서교사를 올해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1,027명 배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사서교사의 대부분은 학급 담임을 병행하고 있는데, 문부성이 전임 사서교사의 범위를 교직원 배치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이는 문자진흥법에서 사서교사의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부터 매년 약 200명 씩 전국 초중고교에 사서 전담 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제8차 공립 의무교육 제1차 학교 교직원 정수 개선계획'에 따라 초등 24학급 이상, 중학 21학급 이상의 공립학교에 최소 0.5명씩을 5년 이내에 배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전임 사서교사 배치 여부는 인사권을 가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결정하지만, 문부성은 이러한 범위 설정을 통해 전임 사서교사 확충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기반을 만들었다. 사서교사는 1997년에 개정된 학교도서관법에 따라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배치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문부성

조사에서도 전체 초등학교의 55퍼센트, 중학교의 52퍼센트 등에 총 2만 4,000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학급 이상 학교에는 거의 100퍼센트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서교사의 상당수는 학급 담임과 겸임하여 학급 및 교과 지도에 바빠 충분한 독서지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테면 문부대신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는 "공립학교의 경우 담임 겸임이므로 사서교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서 수집 및 수리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독서활동 기획이 어렵다"고 따갑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담 사서교사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사서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모델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3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문부성은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 사업으로 새롭게 전국 36개 시정촌(市町村)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른바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추진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학교도서관 자원 공유 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부터 4년 간 시범 운영한다. 전자가 공공도서관 중심의 장서 및 정보 공유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자는 학교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본격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참고로, 2002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활동을 펼치는 학교 비율은 초등 57퍼센트, 중학 36퍼센트, 고등 31퍼센트로 조사되어 상당한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 활동과 풍요로운 감성을 키우기 위한 학교도서관 기능의 강화에 있으며, 독서센터이자 학습정보센터인 학교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실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독서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횡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이 센터를 전국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서 경험자 중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전문가(스태프)'를 채용해 지자체의 교육센터 등에 배치한다. 베테랑 사서 경험자인 지원 스태프가 학교도서관에 적합한 목록을 작성하거나 학교 현장의 상담에 응하면서 도서의 선정과 수집을 도와주고, 학교도서관과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하며, 도서관간의 장서 대차 등을 통해 장서 부족 현상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수업 활용 방안이나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등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을 조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센터의 운영은 독서와 학습의 장인 도서관 활용 기회를 늘려 학생들의 활자 이탈을 제어하자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전담 스태프의 지도를 받으며 각 지역에서 활동할 협력자로 5인 정도의 유상 봉사요원을 둬으로써 학교별 순회를 통한 장서 정리 등의 실무를 담당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등 약 2억 엔이다. 4년간의 시범 실시를 통해 성과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지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전국대회 개최도 계획중이다.

문부성은 이외에도 국어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국어능력(國語力) 향상 모델 사업' 대상 지역을 5개소 추가해 모두 25개소로 확대했다.

✦ 출판계도 문자진흥법 추동 조직화

한편 출판 단체들은 진흥법의 시행을 업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문자·활자문화의 날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을 중심으로 '출판연락회'를 조직하여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대표적인 출판단체인 일본서적출판협회가 문자·활자문화진흥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12월 13일 첫 회합을 갖고, 범 출판계 차원의 총의를 모은 '문자·활자문화 진흥회의'(가칭) 설립을 내걸고 관련 단체에 참가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가판매제의 확고한 유지, 학술출판의 진흥, 저작자 및 출판자의 권리보호, 출판물 소비세율의 경감 등을 추진함으로써 문자·활자문화의 담지자인 출판계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1954년부터 학교도서관법을 시행한 이래 2001년에는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 2005년에는 문자진흥법을 각각 제정해 국가의 독서환경 구축 의무를 명시하고 추진해 왔다. 초·중학교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도 매년 162억 엔 이상이나 된다. 이에 뒤질세라 출판계도 영유아 대상의 북스타트 운동 도입·지원, 각급 학교의 아침독서운동 지원, 전국 서점에서의 구연동화 연중 개최, 책을 읽어주는 독서 어드바이저 양성, '경로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의 추천도서 발표 및 다양한 독서주간 개최, 서점복권 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한 독서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독서 마케팅은 서점 인프라와 함께 일본출판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일본의 독서환경은 크로키(빨리 그린 밑그림) 단계에 머문 한국과 달리 세밀화 단계로 진화해 재빠르게 질주하고 있다. 학교도서관법 제정안조차 몇 년째 국회에 표류중인 우리 상황과 대비된다. **주요**



1. 문자·활자문화진흥법 및 문부성의 시책을 명시한 문부성 홍보 기관지.
2.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시행 계획 및 개념도.
3. 1950년 설립된 이래 종합적인 학교도서관 진흥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홈페이지.

